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R&D 비용 등 손해기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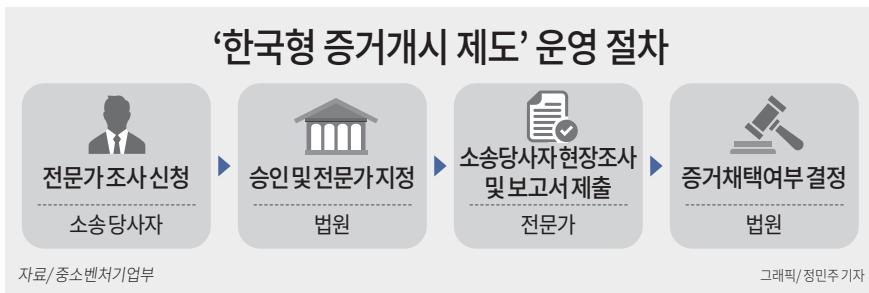
행정조사 등 피해입증 지원 강화
기획·인지 수사, 집중 단속 실시
2030년까지 기술임치 2배 확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법원이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를 겪은 중소기업들은 기술분쟁 과정을 한마디로 ‘속도는 느리고 무게는 무겁다’고 표현했다. 이는 소송 단계에서 피해입증의 어려움, 7년에 걸친 소송에 따른 경영애로 등을 함축적으로



로 표현한 말씀”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의 호소는 간절했다”며 대책 마련 과정을 전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선 기술침해를 당한 기업이 소송과정에서 ‘정보불균형’에 따른 불리함이 없도록 피해입증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또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막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로도 도입한다.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

까지 확대한다.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입증 및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제보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중기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등 입증 및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조치 단계에선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기술 개발 투입비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기업의 R&D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

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손해액 산정기준도 고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해 손해액 산정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수집 데이터는 기술침해 피해기업,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법원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해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만7000여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늘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관련 신문고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D현대중공업

세계 최초 암모니아선 오염수 처리장치 개발

HD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추진선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처리장치와 독성 위험구역 설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미국 선급(ABS)으로부터 기본인증(AIP)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자체 개발한 ‘암모니아 폐수 선외 배출 장치’는 폐수 탱크에 모인 암모니아 폐수의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제어하는 모니터링 장치다. 폐수 내 암모니아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허용 기준 이내에서만 암모니아 폐수의 선외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선내 암모니아 누출 위험 구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독성 위험구역 설정 시스템도 개발했다. 암모니아 추진 설비 및 병커링 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누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중·저위험 구역을 정의해 구역별 필요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차세대 연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혜택 줄고 규제 발목… K-배터리, 북미공략 ‘적신호’

〈세액공제〉

〈취업비자〉

숙련인력 확보 최우선 과제 부상
“단기 실적문화 피하기 어려워”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와 비자 규제 강화라는 이중 악재로 인해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북미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전기차 수요 위축 속에 보조금마저 폐지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숙련 인력 파견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기 지연, 부대 비용 증가 등으로 대형 프로젝트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HI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진 이후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확충 중인 배터리 업체는 ‘정식 취업 비자를 가진 숙련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ESTA, B1·2 등 단기 비자를 활용해 인력을 파견했으나

앞으로는 정식 취업 비자가 사실상 필수화되면서 실제 투입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당국의 전향적 조치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력 수급 불안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배터리 공장 가동 일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사 지연은 금융비와 고정비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납품 차질로 고객사 신뢰를 흔들며 기업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HIL-GA 공장을 비롯해 애리조나 쿨크릭, 미시간 랜싱, 오하이오 파에트카운티 등 4곳에서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SDI도 2개 공장을 짓고 있고, SK온 역시 현대차·포드 등과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배터리 업체들은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공정 지연 가능성 자체가 곧바로 리스크로 이

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와 15조 원 규모의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가동 예정인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이를 소화할 계획이다. 또 테슬라와는 6조 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SK온 역시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와 협력해 대형 ESS를 공급하기로 했다. 모두 ‘미국 생산’을 전제로 한 계약인 만큼, 숙련 인력 투입 지연이 현실화하면 생산 라인 정상화와 납품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오는 30일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되는 점도 배터리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혜택이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 둔화는 불가피해 배터리 수요 감소로 직

결된다.

주민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달 1일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전기차(EV)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 관리를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실적 문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수요가 꺾임(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는 동안은 ESS가 돌파구가 되고, 이후에도 미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외교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기업들도 임원과 전문가를 꾸준히 파견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전문 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투자는 큰 차질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이 10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메인비즈협회

中企 M&A 활성화 ‘맞손’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잠재수요 발굴 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와 메인비즈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메인비즈협회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M&A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수요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M&A 중개를 지원하며, 필요시 인수자금에 대한 보증을 연계하는 등 M&A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승계와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화세미텍 “내년 하이브리드본더 출시”

반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 로드맵 발표

한화세미텍이 내년 초 하이브리드본더를 출시하며 차세대 첨단 패키징 장비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한화세미텍은 오는 1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타이완 2025’에서 하이브리드본더 청사진을 담은 차세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TC본더 ‘SF5M 익스퍼트’ ▲2025년 CoW 멀티칩본더 ‘SF5M TnR’ 출시에 이어 ▲플렉스리스본더 ‘SF5M 익스퍼트+’ ▲하이브리본더 ‘SHB2 Nano’를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본더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성능과 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HS효성첨단소재, 미래 탄소섬유 솔루션 제시

‘탄섬’ 기반 원사 라인업 소개

HS효성첨단소재가 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전시회 ‘CAMX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HS효성첨단소재는 ‘탄섬’ 기반 신규 원사 라인업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항공우주 및 고사양 산업용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3K 원사, 차세대 고압용



CAMX 2025 HS효성첨단소재 부스 전경.

기용 초고강도 원사 등 미래 탄소섬유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원관희 기자